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22.



법 제 처

순서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II.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III.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	4
②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	9
③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	13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7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의 입법성과 창출

- (국정과제 입법계획) 국정과제 법률안 총 488건 중 284건 통과(58%)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90건 중 261건 제·개정 완료(90%)
- (민생토론회 입법계획) 민생토론회 후속 법률안 총 100건 중 33건 통과(33%), 하위법령안 총 68건 중 44건 제·개정 완료(65%)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22.12.27. 공포)하여 정부 출범 첫 해에 국정과제 조기 이행* **국정 13-5**
 - * 발의 9개월만에 국회통과 완료('22.5.17.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22.12.8. 국회 통과)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해 지방 사무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 등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 **국정 111-2**
 - * ('23년) 82개 법률 국회 제출(29개 국회 통과) 및 65개 대통령령·부령 공포·시행

□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267개 법령 정비 **국정 1-3**
 - * 65개 법률 국회 제출(5개 국회 통과) 및 139개 대통령령, 63개 총리령·부령 공포·시행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근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 * 6개 법률 국회 제출('24.9.26. 5개 국회 통과) 및 2개 대통령령, 4개 부령 공포·시행('24.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청년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148개 법령 정비 **국정 92-3**
 - * 16개 법률 국회 제출(9개 국회 통과) 및 74개 대통령령, 58개 총리령·부령 공포·시행

2 개선 필요사항

- (국회 법안처리 대책 마련 필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 계류 중
 -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수립·추진 필요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입법 환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나, 입법 환경은 불확실
 - 불확실한 정치 · 국회 일정으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국정과제 법안 및 민생 법안 등)의 통과 난항 예상
 - 불확실한 입법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One-Voice 대응 및 입법 역량의 결집 필요
- (경제 여건) 고물가 · 고환율 · 경기회복 둔화 등 경제 여건 악화 우려, 미국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25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낮을 전망(한국은행)
 -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성장이 중요하나, 고환율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산업연구원), 규제정비 등 적극적 법 · 제도 개선 지속 필요
- (미래 대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입법수요 대응 및 저출생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이 미래 대비에 필수적인 상황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 수요 증가 전망
 - 저출생 및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 수요 증가 예상
 - 시각장애인 · 체류외국인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의 지원 요구에 대응할 필요

2025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0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

정부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

02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제 개선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신속한 법령해석

03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수요자 밀착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세계와 함께하는
법제교류 확대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

□ 주요 입법 완수를 위한 총괄 관리 강화

- (입법계획 이행 완료 지원) 국정과제·민생토론회 입법계획 중 잔여 입법과제의 신속한 입법조치 추진
 - 입법 상황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주요 법안 관련 입법계획의 이행 완료 추진

【 입법계획 추진 현황('24.12.31. 기준) 】

구분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법률	국회통과 완료	하위법령	정비 완료	법률	국회통과 완료	하위법령	정비 완료
현황	488건	284건	290건	261건	100건	33건	68건	44건

- (국회 계류 법안 관리 강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관리를 통해 국회통과 지원 및 차질 없는 정책 수행 뒷받침
 - 계류 법안에 대한 부처별 국회통과 노력을 매월 점검·독려
 - 국회통과 필요 우선순위가 높은 정부 추진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까지 입법상황 계속 관리

□ 부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의원입법 지원 플랫폼 구축

- (부처 수요를 반영한 법제 지원) 예비검토(의원발의 前) 및 사후검토(의원발의 後)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각 부처 수요에 맞는 법제 지원

▶(지원대상) 양극화 해소, 4+1 개혁 관련 법안, 국정과제·민생토론회 후속 법안, 각 부처의 주요정책 법안 등

- 의원입법 사전·사후 지원계획을 수립, 분기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속 검토 법안목록 현행화, 검토 우선순위 선정
- 신속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해 우선 검토·회신하는 「신속검토 제도」 시범 실시

- (의원입법 원스톱 서비스) 부처에서 원하는 경우 전담법제관을 지정, 예비검토·사후검토 및 이견조정까지 단계별 One-stop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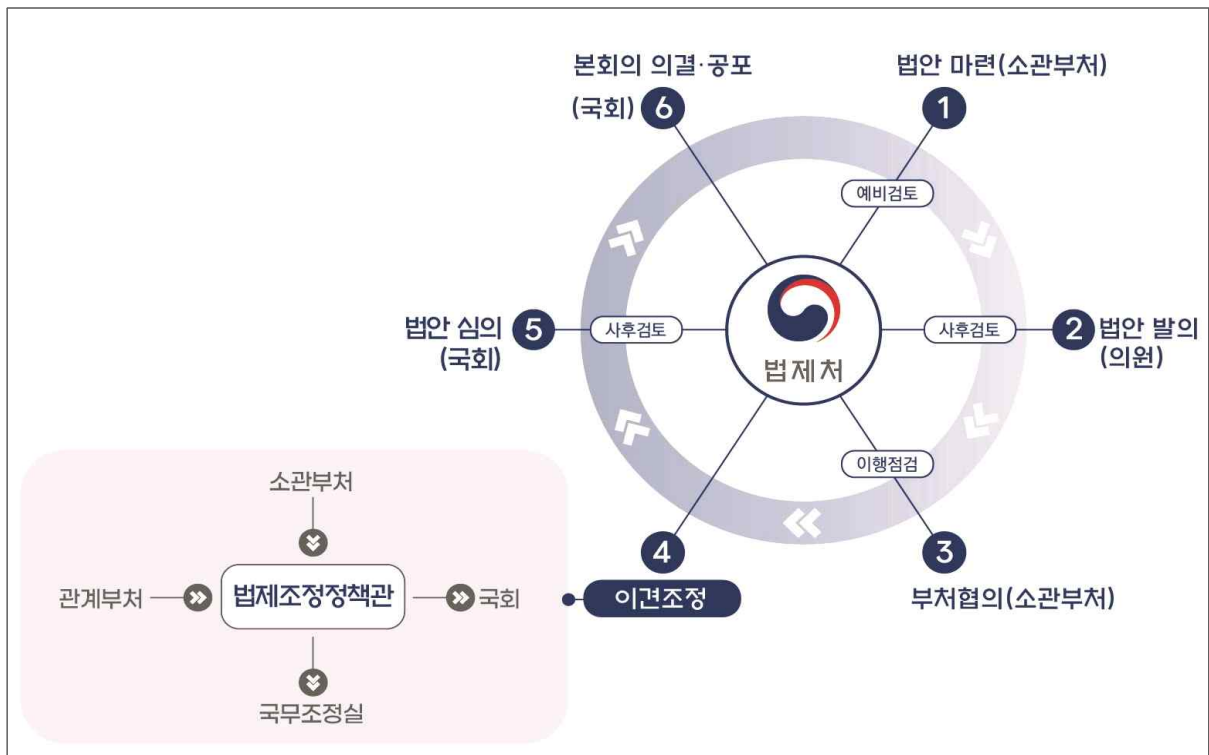
【 의원입법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 】

- ① (1단계: 예비검토) 발의 前 조문화, 법체계 검토 및 대안 제시
- ② (2단계: 사후검토) 법안 발의 後 상임위 심사 前 각 부처에서 국회 심의 대응에 필요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사후검토 의견 제시
- ③ (3단계: 이견조정) 법안 발의 後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 시 이견조정

- (선제적 이견조정 활성화) 법제처에 접수된 이견 및 이견조정 수요조사(매월)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 법안 조정 실시, 수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 국정과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정(예산 등 명백히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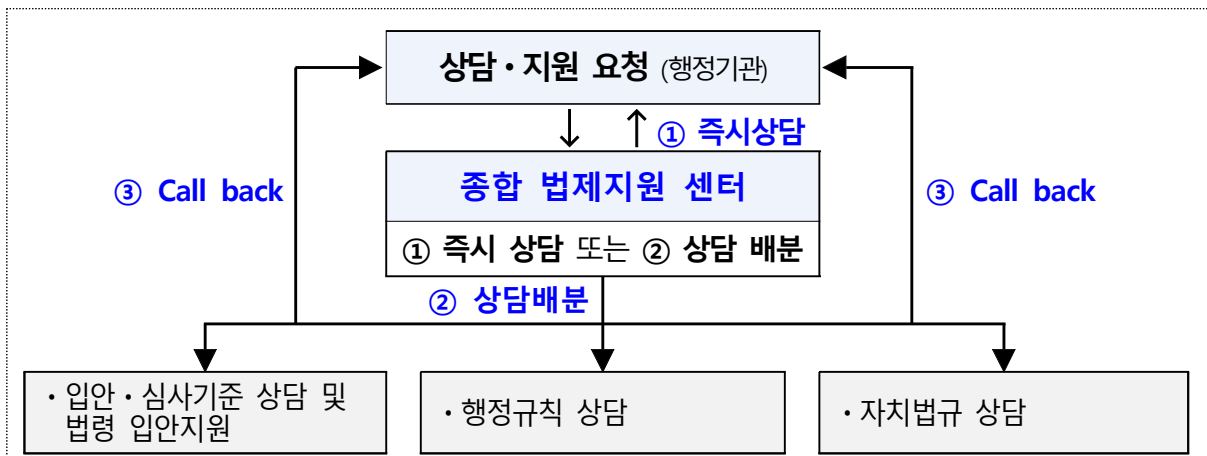
【 의원입법 지원 플랫폼 】



2 정부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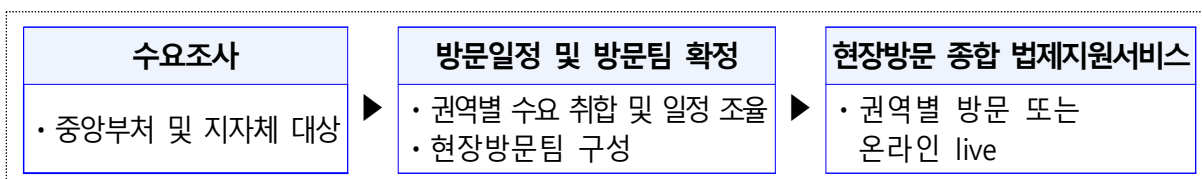
□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 법제지원 센터 운영

- (체계적·효율적 법령 상담·지원 제공)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상담 업무를 「종합 법제지원 센터」로 일원화하여 통합·운영
- 전담인력을 배치, 직접 처리(①즉시 상담)하거나 부서 간 협업(②상담 배분 및 ③Call Back 방식)을 통해 입안지원·상담 운영



- (현장형 종합 법제지원) 법령 등을 만들고 집행하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종합 법제지원·상담을 통해 법적쟁점*을 One-Stop으로 해결

* ①정책의 조문화 방법 및 입안 절차, ②현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와의 충돌 여부, ③예상되는 법리적 쟁점 해소방안 등



□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지원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확대

- (선제적 원스톱 법제지원) 부처의 정책발표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법령안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부처에 선제적으로 원스톱 법제지원 실시
- (원스톱 법제지원 대상 대폭 확대) 신청 대상 법령을 포함하여 연계된 하위법령·행정규칙까지 원스톱 지원 대상에 포함(법안 세트별 지원 실시)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원) 저출생·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현안 관련 특정 부처와 상시 협업을 통해 적극적 입안지원 추진

□ 협업형 법제교육을 통한 국정현안 해결 지원

-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제 교육’ 강화) 현안 법안·조례의 입안·심사·해석의 이론 및 사례 등 법제 주 과정을 집약한 ‘통합 법제과정’ 운영
 - 현안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법제+해석의 고수(高手) 과정’ 특화 운영
- (‘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 신설) 저출생·AI 등 시급한 국가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형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 공직자 역량 배양 목적의 법제교육과정을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연계 실시

3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정책 참여 지원 강화

- (중앙·지방 간 법제 조정 강화) 중앙·지방 간 법제분야 공식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자치법규 간 전문적인 조정·중재 역할 수행
 - *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에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 추진
- (국가 정책·입법과정 지방 참여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3년차 과제로 ‘국가 정책·입법 과정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정비 추진
 -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 】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 확대

-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지방보조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규범 영역 확대 법체계 개선(~'25. 3월)

정비 예시

▶ **지역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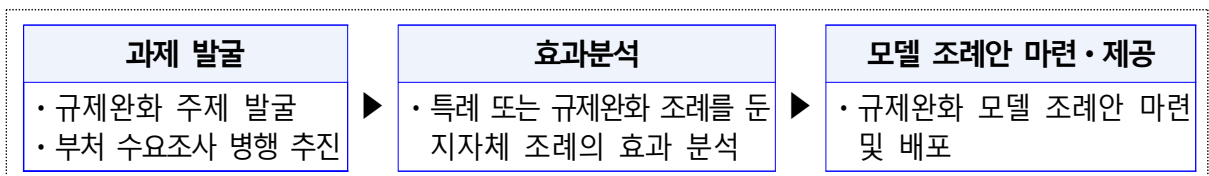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

개선 지역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 위임 신설

- (지자체별 특화 법제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사업에 따른 원활한 후속 자치입법 마련·운용을 위한 맞춤형 법제지원* 실시

* (중앙부처) 참고 자치법규안 검토 (지자체) 필수위임조례 사전검토·조례안 입법모델 마련 등

- (사전적·적극적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규제완화나 주민권익 보호 등 우수 자치법규 발굴·확산을 위한 입법모델 제공 및 자율정비 지원



- (알기 쉬운 조례 정비 확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용어·문장 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지자체를 시범정비 협업 기관으로 선정·지원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내실화

- (자치법규 심화·실습 교육 확대) 기존 강의 중심 법제교육에서 자치법규 관련 심화·실습 교육*으로 확대 개편, 3일 이상 종합 집중 교육과정 운영

* (예시) 자치법규 입안 원칙 - 조례 재의·재소 사례 - 조례 정비 사례 - 입안 실습·토론

- (지방의회 의원 등 법제연수과정 강화) 법제연수과정을 확대·개편*, 수요에 따라 지역별·권역별(수도권·충청권·영호남권 등) 실시

* (지방의회 의원) 연 1회 → 연 3회 / (정책지원관) 연 2회 → 매월

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 소상공인 등 창업·영업부담 완화

- (사업 진입·유지기준 개선) 사업 진입 또는 유지에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경력 등 보유 요건 개선
 - (영업 공간 기준 유연화) 법령상 영업 공간(사무실·영업소 등) 구비의무 및 면적하한 등을 영업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유연화
 - (인력기준 완화) 인력(명수)·경력(기간) 등 보유 요건은 업종 특성을 고려, 1인·소규모 등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완화

정비 예시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현행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66㎡ 이상)을 요구하여 사업자 부담

개선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연화

- (분담금 등의 납부 편의 제고)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에 대한 납부 편의 제고
 -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기 등 근거 마련

정비 사례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환경부)

종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시 분할납부 등 근거 없음

개선 중소기업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 (의무교육 이수 부담 완화) 청년 등이 군복무 또는 학업 수행 등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교육 면제·유예 근거 마련

정비 사례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부담 완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종전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군복무 등에 대한 근거 없음

개선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군복무 등을 추가

- (청각장애인 어학성적 기준 별도 마련)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영어 시험 성적 기준을 청각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비 사례

- ▶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영어시험성적 기준 설정 근거 마련(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 현행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별도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개선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별도 기준 설정 근거 마련

□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협업 정비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합리화)^{관계부처 협업 추진} 인증 취득·유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시간, 비용 및 복잡한 인증 절차 등 인증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시장진입 및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

정비 사례

- ▶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도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부)
 - 중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전 인증갱신을 신청해야 함
 - 개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신청 기간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 제도 신설

-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원)^{국조실 협업} 규제샌드박스 제도*(19. 2. 시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효성·안정성이 담보된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법제화 지원

*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신기술 시도를 위해 실증특례(시장 테스트 허용),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가) 부여

- (경제형벌 규정 4차 개선)^{기재부·법무부 등 협업}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4차 개선과제(24. 12. 발표)에 대하여 법제처 주도 일괄정비 추진

정비 예시

- ▶ 품질인증내용과 다르게 전통주 광고 시 형벌 완화(전통주산업법, 농식품부)
 - 현행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를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 시,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부과
 - 개선 인증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2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제 개선

□ 국민 중심의 미래 대비 법제 개선

- (인구소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입법영향분석) 지역활성화와 연계된 폐교 활용방안 등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연구·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정비
- (행정 디지털화 촉진 법령정비) **과기부·행안부 등 협업** 전자문서로도 원본의 제출·첨부, 반납·반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령 일괄정비 추진
- (미래 대응 법적 기반 조성) 저출생 등 주요 미래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 연구·분석 및 법제적 지원방안 모색

□ 따뜻한 동행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 (권위적 규정 정비) 시대에 맞지 않는 관(官) 중심(국가-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지방) 규정 및 용어 정비 추진
 - 인허가 등 신청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취소 후 일정기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등 권위적 절차 정비

정비 예시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

현행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개선 해당 규정 삭제 또는 법령상 근거 마련

- (차별적 규정 정비) 나이·성별·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적 규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등 정비

정비 예시

▶ 위원장 직무 대행을 연장자가 수행

현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지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대행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최고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개선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같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정비

▶ 장애인 비하 용어

현행 농아자 ➡ **개선**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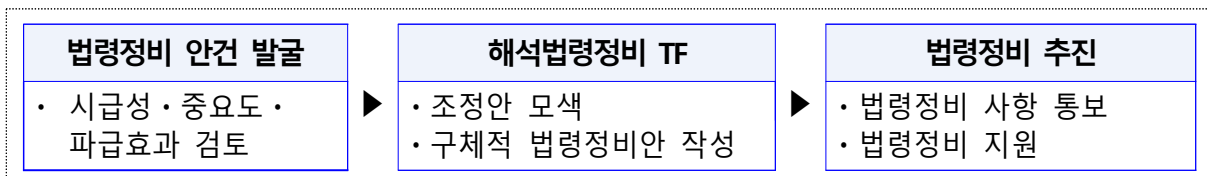
3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신속한 법령해석

□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

- (민생회복 안전 신속 해석)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①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촉진 관련 안전, ②정부 정책의 일관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안전 신속 처리*

* 신속처리안전 지정, 전담 TF 구성, 전문위원회 운영 등

- (법령해석과 법령정비 연계 강화) 시급성 · 중요도 · 파급효과가 큰 법령해석 관련 법령정비 사항의 신속한 정비 추진
 - 「해석법령정비 TF」를 통해 법령정비 사항에 대한 법제적 검토 및 대안 모색, 소관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등 적극적 협의 · 정비



□ 법령해석의 협의 · 조정 역할 강화

- (갈등 해소를 위한 법령해석 협의 · 조정 강화) 법령해석 이전에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협의 · 조정 처리를 통해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

【 법령해석 협의 · 조정처리 대상 】

- ① 법제처의 검토의견 제시로 의견 대립이 없어진 경우
- ② 법제처 검토 중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변경한 경우
- ③ 법령해석 요청 시점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제처의 협의 · 조정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밝힌 경우

-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주요 부처(부서)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등 상시 협업체계 구축, 법령해석 관련 업무처리의 신속화 · 효율화 추진

협의 · 조정 사례

▶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저지,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

내용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처리업 허가취소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 연계 법령검색 고도화)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고도화를 통해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Law Navi), 연관법령 검색 등 AI 응용 서비스 개발

Law Navigation 검색 예시('애견' 입력)

가족법, 문화법, 교육법, 복지법, 매매법, 이용법

애견 (1), 애견법 (2), 애견법시제 (3), 복지 (4)

가족, 문화, 교육, 복지, 매매, 이용

연관법령정보 시스템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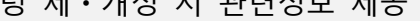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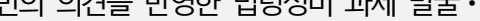
가족법, 문화법, 교육법, 복지법, 매매법, 이용법

애견 (1), 애견법 (2), 애견법시제 (3), 복지 (4)

가족, 문화, 교육, 복지, 매매, 이용

-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수집(비정형 데이터 수집·변환)·분석·활용하여 정부기관과 민간에 공유·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 **(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 국회 심사보고서, 발의법률안, 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 등
- ▶ **(해외 법제 데이터)** 각국의 법령정보, 법령 검토서 등
- ▶ **(뉴스, SNS 데이터)** 국민이 불편·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비 수요 의견 등

법령 제·개정 시 관련정보 제공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정비 과제 발굴·공유 
 법제 빅데이터 분석  관계 부처 관련 정보 공유	 뉴스·SNS 정보 수집  법령정비 과제 발굴·공유

□ 수요자 중심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개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성 · 접근성 제고) 헌법기관 ·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 과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법령해석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중앙부처 법령해석 통합 ·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 개시(25.4월~)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 국민 ·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우수사례 발굴*

* (시행근거) 공공데이터법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공동활용 촉진

- 법령 관련 공공데이터를 확대, 국내 리걸테크 사업자가 ODA 사업을 통해 구축 · 개선된 해외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서비스 확대

-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제공)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일상생활안전 등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 (법령) 저출생 지원, 은퇴 · 연금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등

** (조례) 귀농 · 귀촌 · 귀어 지원, 폭염피해 예방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

- 신속 ·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 단축(격월 ⇨ 매월)

-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시각 법령정보 콘텐츠 확대) 국민적 수요(대국민 설문조사, '24.12월)가 높은 재정 · 경제 분야 법령 등을 그림 · 사진 · 표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

* '25년 530여개 콘텐츠 추가 개발 · 제공 예정

【 개별 조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 예시 】

그림	사진	절차도	관계도	표	계산식

-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재한 외국인·이주민의 국내 생활 편의 증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법령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확대
 - 국내 체류외국인이 10만명 이상인 4개 언어(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로 그림·표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 제작·제공*

* 노동, 복지, 사회안전 및 K-창업·투자 분야 집중 개발

□ 글로벌 법령정보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강화

- (해외법령 정보 제공 분야 확대) 수출유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산업*에 추가하여 K푸드·K시푸드·K건설 등 해외법령 정보 제공 산업 확대

*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법령제공 국가 및 분야 확대

-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각 산업별 실무 정보 제공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One-Stop) 제공 구현

【 산업별 법령정보 협업계획 】

분야	K푸드(신규)	K시푸드(신규)	K건설(신규)
협업 기관 (웹사이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fi 농식품수출정보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정보포털	해외건설협회  OCIS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분야	K콘텐츠(확대)	K화장품(확대)	K의료(확대)
협업 기관 (웹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WelCon Well-made K-Content	식품의약품안전처  K-C-A 대한화장품협회	보건산업진흥원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외국인의 국내체류 및 투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문 법령 번역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추진

* (예시) 「법인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 세계와 함께하는 법제교류 확대

□ 법령정보시스템 ODA의 기반 강화

- (ODA 사업의 내실 강화) ODA 사업(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우즈벡,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도모

< '25년 법제처 ODA 사업 계획 >

수원국	사업명	기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3.~'28.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24.~'25.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25.~'27.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25.~'26.

- (ODA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신규 ODA 후보국 추가 선정^{양적 확대} 및 ODA 사업방식의 다각화 추진^{질적 확대}

- 법제 유관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 등)과 협업, 타부처 ODA 사업의 법·제도 분야 컨설팅 보고서 작성·제공 등 시스템 ODA 분야*에서 법제처 역할 확대 추진

* 타부처의 일부 정보시스템 ODA 사업에 대해 수원국의 법/제도 상충 및 법제전문가 부재 등에 따른 법제 정비 미흡 문제 대두

▶(사례) ODA 예비조사 단계에서 수원국 법/제도의 미비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법/제도 정비 방안을 사업계획에 연계하지 않아, 시스템 미활용

□ 아시아 지역 법제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아시아 국가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들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CALI) 설립 추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준비위원회('24.11.1. 발족)를 통해 참여 국가(태국·캄보디아)와 조직·기능·운영규정(안) 협의 추진, 하반기 중 설립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 등 교류·협력을 통해 참여 국가 확대 추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

- (주요 기능) ①법제 현안 공동 대응 ②법제행정 상호 발전 협력 ③법령정보 공유 및 법령정보시스템 전파 ④ 법령 정비 경험 공유
- (대상 기관) 태국 내각사무처·캄보디아 내각사무처(협의 완료)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법제기관(협의 추진)

-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 가질 미래 법제 쟁점을 회의 주제로 선정, 하반기 개최